

# 오신환 교체 초강수... 폭발 직전 '바른미래'

### 지도부, 사개특위 위원 채이배로... 문희상 의장 사보임 허가할 듯 바른정당계, 정당성 놓고 반발... 분당 기로·정계개편 가시화

바른미래당이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자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보임의 법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커졌다. 바른미래당 내부는 폭발하면서 정계개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만났지만 설득이 되지 않아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국회 사무처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이 막아서 접수하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오늘 내내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개특위 위원 교

체라는 강수를 던진 것은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립,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들의 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한 교육책이라는 평가다. 이날 오전 오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분열을 막고 제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 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 상정 안건은 소관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2명 이상의 찬성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당 위원 7명 전원이 반대하고,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 트랙 지정은 불발된다.

이 경우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이 절실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번 패스트 트랙 협상에 임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사보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신환은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지 않는다. 국회법상 (당사자 의사에 반해) 누구도 사보임을 시킬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저는 사임계를 제출한 적도 없고, 그런 뜻을 밝힌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의총에서 불과 1표 차로 패스트 트랙이 추진될 정도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상황에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이뤄지면 바른미래당의 갈등은 폭발 직전이다. 정치권에서는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바른미래당의 분열을 넘어 분당(分黨)으로 가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 지상욱·이태규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성명서를 통해 "당의 분열을 유도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손 대표를 물론 김 원내대표의 퇴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장당 대주주라 할 수 있는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와 가장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당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결국 25일 열리는 사개특위 결과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신미숙 靑 균형인사비서관 사표

### 환경부 인사 의혹 수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4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표 처리 여부에 관해)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려 없이 곧 사표 수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부담을 느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다음 달 중순께 김봉준 인사비서관을 추가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온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근절 3법' 추진

###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은 24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시험검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배출조작 근절 3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배출사업장에 대해 2차 레 이상 적발시 30일

이상 조업정지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시험검사법)을 개정, 무자격 불법 측정대행업체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임업인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법 발의

### 황주홍 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국회 농수축산위원회(고흥·보성·장흥·강진)는 24일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18일(산림조합중앙회 설립일)을 '임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의 날과 수산인의 날은 각각 11월 11일과 4월 1일로 법정기념일



로 지정되어 농·수산인을 위한 격려 행사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임업인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농·수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

는 실정이다. 황 위원장은 이번 '임업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농·수·임업인 모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응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피난 핑계 중국어선 불법조업 예방법 발의

### 정인화 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24일 악천후를 피해 우리해역으로 긴급피난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 어업 질서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악천후를 피해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지정된 긴급피난항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정선과 선박 검색 등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고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외국어선이 긴급피난할 수 있는 항포구를 지정해 관리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업 질서를 바로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사보임 허가 말라" 의장실 점거

### 고성·막말에 이수라장 문 의장, 쇼크로 병원행

패스트 트랙 후폭풍에 국회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전날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한 방문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허가하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 트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할 것"이라면서 "국회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문 의장의 발언이 '사보임 허가'의 뜻으로 해석되거나 원내대표와 동행한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 '의장직 사퇴' 주장 등 거친 설전이 오갔고 일부 의원은 국회 직원들과 서로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그러자 문 의장은 "국회가 난장판이다. 의장실에 와서 뭐 하는 것이냐"며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맞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결국 30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 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분이 넘는 설전과 몸싸움 끝에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고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는 의무진의 소견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런 가운데 문 의장이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싼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에서는 '성추행'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의장에 대한 고소·고발 검토는 물론 즉각적인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 측은 "밀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당 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성 추행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해공갈"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입당을 조건으로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되는 발언이다.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 트랙을 막기 위한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주)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원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원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